
2014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

2013.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 요약 〉	1
I. 지난 1년 정책대응과 평가	12
1. 그간 정책대응	
2. 평가	
II. 최근 경제여건과 전망	14
1. 대외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구조적 여건	
4. 2014년 경제전망	
III.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20
IV.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22
1. 내수활력 제고	
2.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3. 경제체질 개선	
V.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34
【별첨 1】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36
【별첨 2】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38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41
【별첨 4】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45

2014년 경제정책방향 [요약]

I . 대내외 경제여건	2
II .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4
III .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5
IV . 2014년 경제전망	9

I. 대내외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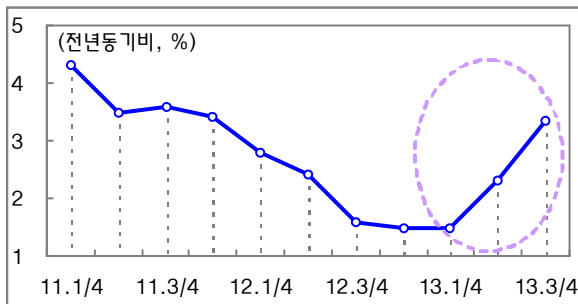
◇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

① 추경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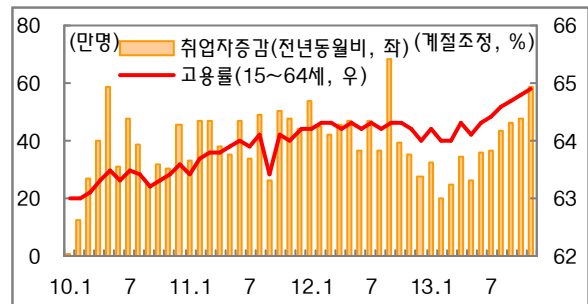
○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였고, 일자리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40만개 이상 증가세

* 50대 이상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2/4)41 (3/4)47 (10월)48 (11월)51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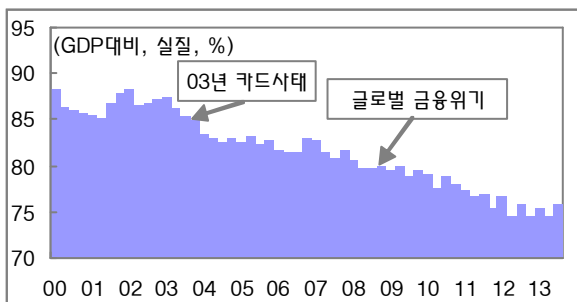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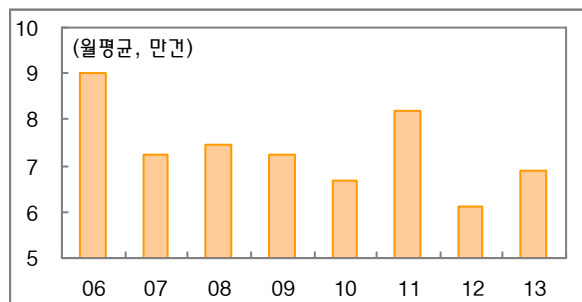
②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산적

○ 내수가 부진하여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어려움이 지속
 - 최근 소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내수 부진이 누적되었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

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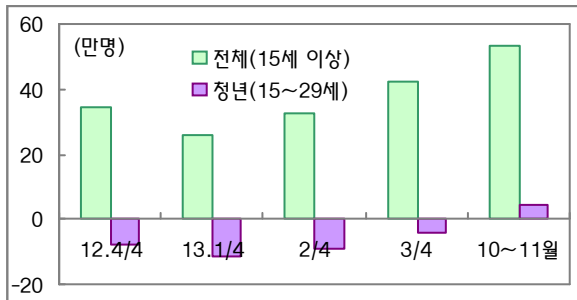


주택 매매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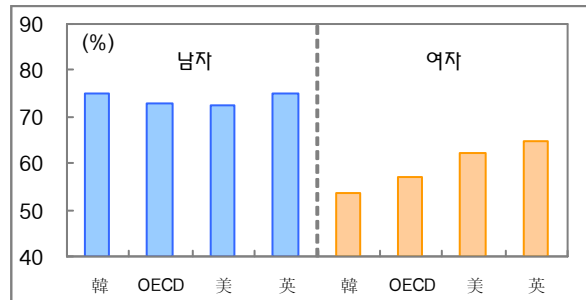


- 최근, 고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

청년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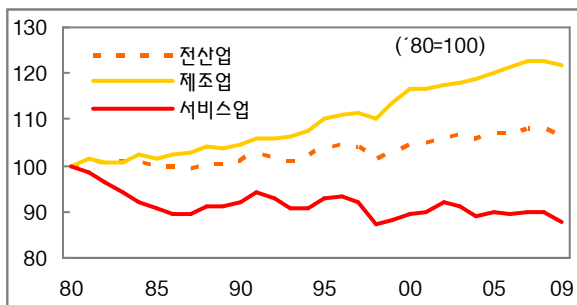


주요국 남·여 고용률 비교('12)



-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
 - 서비스업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공공부문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산업별 생산성 추이(생산성본부, 중요소생산성)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WEF)

구분	'12	'13
◇ 전체순위	19	25
○ 기본요인	18	20
- 제도적 요인**	62	74
○ 시장 효율성	20	23
○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	20

* 총 148개국 중 ** 정부규제 부담, 정부지출 효율성, 법체계 효율성, 정책결정 투명성 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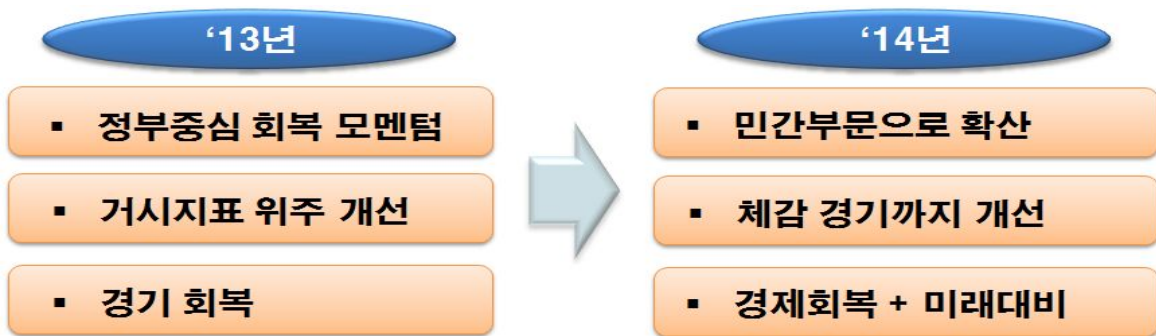
③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가계부채 부담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08년부터 지속해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계부채 부담 지속,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

◇ '14년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의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

II.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 정부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
- ◇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
- ◇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대비



Ⅲ.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1. 내수활력 제고

◇ 투자·소비 회복 등 민간중심의 탄탄한 성장 유도

- ① 투자 촉진,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 규제 개선 등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②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추어 규제개선,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 ③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 視界를 가지고 리스크 대응 강화

투자·소비 여건 개선

- ▶ 규제개선,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 외평기금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 S/W투자 세제지원
- ▶ 서비스산업 육성
 - 보건·의료, 교육 등 규제완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내관광 활성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 ▶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 사교육비 경감, 주택연금 공급확충, 잠자는 돈 활용 등 소비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 ▶ 전→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
 - (공급) 매입임대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수요)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지원 강화
- ▶ 공유형 모기지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 ▶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건축·재개발·주택금융 제도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 재정: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 운용
- ▶ 통화: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운영,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과 외채상환 추진

리스크 대응 강화

- ▶ 대외 리스크 대응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정책대응과 함께 G-20 국제공조 등 전방위 대응체계 확립
 - 장기간 진행 가능성에 대비, 중장기 시계하에 정책여력 확보·대응
- ▶ 가계부채 연착륙, 취약업종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2.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노력 배가

- ①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 일·가정 양립 등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②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의료비 등 서민부담 완화
 -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정착
- ③ 가계지출 부담완화,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중산층 기반 강화

청년·여성 등 일자리창출

- ▶ 청년: 선취업 후진학 촉진, 청년창업·해외취업 지원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확산, 일·학습 병행제 기반 구축
 - 청년전용 창업펀드 조성, 재도전 지원센터 설치
 -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 운영, K-Move 센터 확대(3→7개소)
- ▶ 여성: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수립
 - 육아휴직제도 확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 ▶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확산
- ▶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등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생계비 부담 완화

- ▶ 생활물가 안정
 -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 원가절감 노력 강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 교육비·의료비·서민금융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 정착

-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
- ▶ 일을 통한 복지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 ▶ 고용·복지센터 설치, 공통브랜드화 등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중산층 기반강화

- ▶ 가계지출 부담완화,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중산층 기반 강화
- ▶ 자영업 경쟁력 강화

3. 경제체질 개선

◇ 우리경제가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

- ① '14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
- ②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행
- ③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 ④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공공부문 개혁

-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3/4분기말 중간평가 실시
 -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
-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재정준칙 강화, 조세지출·예산 연계)

경제민주화

- ▶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도입된 제도들의 안정적 정착·시행
- ▶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 상생협력기반 구축

수출·해외진출 촉진

- ▶ 무역구조 변화 선제대응
 - 보건의료·한류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 온라인 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무역방식 활용 수출
- ▶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
- ▶ 정상외교 경제성과 극대화, FTA 활용 제고

미래대비

- ▶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
 -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
 - * (예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4.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업, 정책집행 점검 강화

1 「협업·개방·공유」의 정부 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

-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협업 활성화
-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 월간 재정동향 발간,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2 정책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 구현

- 민·관 합동 정책현장 점검 등 정책 집행실적을 내실있게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

협업과 개방·공유

- ▶ 협업 활성화
 -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 확대
 - 협업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부여
 -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 대폭 확대, 국민 접근성 제고
 - 월간 재정동향 발간,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모바일서비스 제공
 - 고용관련 보조지표 발표

정책집행 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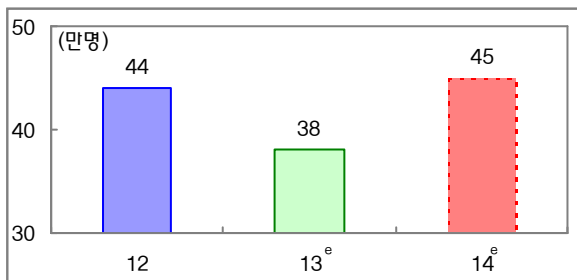
- ▶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현장 개최, 민·관 합동 정책현장 점검
- ▶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집행·점검에 반영

IV. 2014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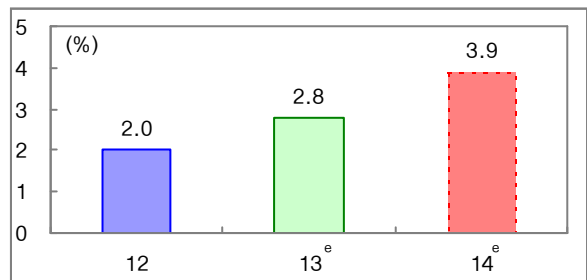
◇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등 민생안정 기반 강화

- ① **(고용)**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
 - 고용률(15~64세)은 금년(64.4%)보다 **0.8%p** 수준 개선된 **65.2%** 예상
 -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 ② **(성장)**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경제 성장률(IMF, 3.6%)을 상회하는 3.9%** 성장
- ③ **(물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연간 **2.3%에서 안정**
- ④ **(경상수지)**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700억불)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어 연간 **490억불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교역량 증가 등으로 연간 **6.4%** 증가, 수입은 수출과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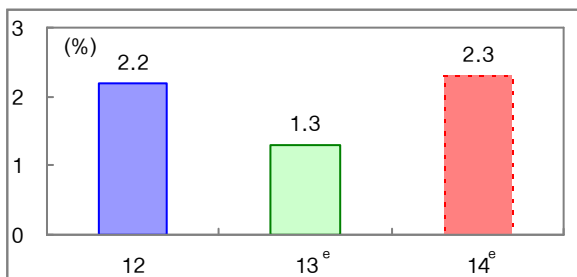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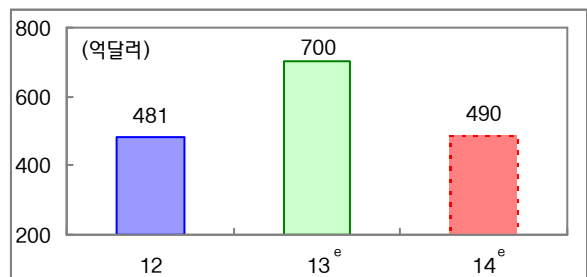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① (1/4분기) '14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산배정 · 개정세법 시행 등 정책추진기반 마련

○ 경제 활성화 ·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

구분	내용
12월말 ~1월	추진기반 ·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산안-세법개정안 등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 주요사업예산 조기배정, 상반기 신속적인 재정운용 준비 · 개정 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내수 · 국내관광 활성화방안, 통합 정책모기지 출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지원 확대
	체질 ·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 ·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제출 · 정상외교 경제분야 범정부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2월	추진기반 · 월간 재정동향 발간
3월	내수 ·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사교육비 경감대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생 ·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중산층 기반강화방안
	체질 · 4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우선 추진,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② (2/4분기) 면밀한 사전준비 ·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과제들은 협업 · 공론화 과정을 거쳐 2/4분기 본격 추진

구분	내용
4월	내수 ·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통합공시
	민생 · 유통구조 개선 성과점검과 보완대책,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체질 ·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5월	내수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 잠자는 돈 활용방안
	체질 · 조세지출 · 예산 연계 강화방안, FTA 활용성과 점검과 보완방안
6월	내수 · 물류서비스 효율화, 제조업-서비스업 차별여부 점검과 개선책 강구
	일자리 · 부처별 일자리 창출효과 점검 · 평가체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체질 ·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③ (하반기) 상반기 추진과제를 점검 · 보완(필요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 경제체질 개선 · 구조개혁 본격화

구분	내용
3/4분기	내수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그린건축 · 리모델링시장 활성화방안
	민생 ·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방안, 국세청-사회보험공단간 복지정보 공유 강화
	체질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 ·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중간평가 실시
4/4분기	내수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와 경쟁시스템 구축

2014년 경제정책방향 (본문)

I. 지난 1년 정책대응과 평가	12
1. 그간 정책대응	
2. 평가	
II. 최근 경제여건과 전망	14
1. 대외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구조적 여건	
4. 2014년 경제전망	
III.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20
IV.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22
1. 내수활력 제고	
2.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3. 경제체질 개선	
V.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34

I. 지난 1년 정책대응과 평가

1. 그간 정책대응

◇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주요 과제에 적극 대응

□ **(일자리 창출)** 그간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집행하고 국정과제 이행기반 구축

○ 재정확대*와 조기집행(상반기 60.3% 집행), 금리인하($\Delta 25bp$)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 17.3조원 추경(5.7, 국회의결), 3.8조원의 재정보강 대책 마련(6.29, 9.17, 11.13)

- 주택시장 정상화(4.1, 8.28),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5.15)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시행

* 총 28.8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발굴·지원,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

○ 고용률 70% 로드맵(6.4), 창조경제 실현계획(6.5) 등 국정과제 이행기반 구축

□ **(민생안정)** 농수산물 수급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 노력 강화

* 통신(5.14)·농산물(5.27)·수산물(7.10) 분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

○ 보육료·양육수당·교육비 지원, 건강보험 확대, 서민 주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 **(리스크 관리)** 양적완화 축소,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

□ **(정책추진 기반강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약가계부(5.31),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기반 확충

○ 경제관계장관회의 부활(4.2), 현장방문*·간담회 실시 등 협업과 소통의 정책추진체계 마련

* (부총리) 새만금, 광양제철소 등 1박2일 현장방문 포함 16회, (국토부) 전세 임대주택, 새벽인력시장 등 28회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 58회 등

2. 평가

◇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필요

- 저성장 흐름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경기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민생여건도 다소 개선
 - (성장) 3/4분기 중 '11.4/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에 진입하였으며, 민간부문 회복모멘텀도 점차 강화
 - * '10년 상반기 이후 3년만에 2분기 연속 전기비 1%대 성장
 - * '09.2/4~'10.1/4분기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성장세 확대 (1/4분기 1.5% → 2/4분기 2.3% → 3/4분기 3.3%)
 -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점차 회복,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완만하게 개선
 - * 내수의 성장기여도(전기비, %p):('12.4/4)0.4 ('13.1/4)0.6 (2/4)0.8 (3/4)1.6
 - * 수출(통관, 전년동기비, %): ('12.4/4)△0.4 ('13.1/4)0.4 (2/4)0.7 (3/4)2.7
 - (민생안정)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안정세
 -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2.4/4)34.2 ('13.1/4)25.7 (2/4)32.4 (3/4)42.1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11)4.0 ('12)2.2 ('13.1/4)1.6 (2/4)1.2 (3/4)1.4
 - (리스크 관리) 외채구조 개선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美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등 신흥국과 차별화
 - * 단기외채/총외채(%): ('12.4/4)31.1 ('13.1/4)30.2 (2/4)29.4 (3/4)27.1
 - * CDS 프리미엄 변동폭(6~11월, bp): (한국)△27 (인니) 52 (태국) 32 (터키) 62
-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않고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아직 민간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양적완화 축소·美 채무한도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 旣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집행노력 강화

⇒ '14년에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를 확충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 마련

II. 최근 경제여건과 전망

1.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그간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美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 대전환 진행

① (세계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통화·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으나, 주택시장 호조와 소비·투자 개선 등으로 회복세
- 유로지역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고, 일본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세
-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경기·구조적 요인 등으로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둔화** ('00~'07년 신흥국 평균성장률 6.5%)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3.10월,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13년	2.9	1.2	1.6	△0.4	2.0	4.5	7.6	3.8
'14년	3.6	2.0	2.6	1.0	1.2	5.1	7.3	5.1

② (국제금융시장) 美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 향후 美 양적완화 축소 속도·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주요국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③ (위험요인) 美 양적완화 축소, 일본경제 향방 등 불확실성 상존

- 美 양적완화 축소는 '08년부터 지속해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으로 향후 세계경제·금융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가능성
- 美 채무한도 협상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성장둔화·국가부채 부각 등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도 세계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 * 美 예산안은 의회 통과했으나, 채무한도('14.2.7일 적용유예) 불확실성은 상존
-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구조개혁 미흡·고용부진 등으로 유로지역 회복세도 약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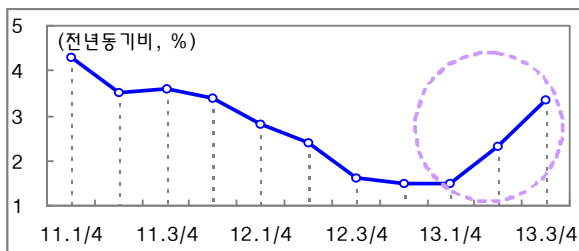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여건

◇ 우리 경제는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고, 외환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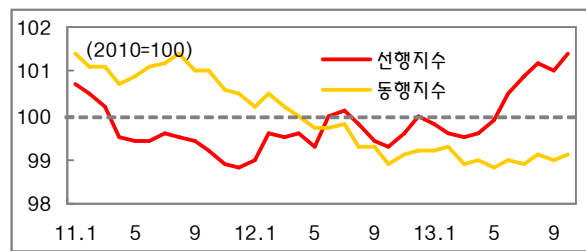
① (경제상황) 성장·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저성장 흐름에서 반등

○ '13년 3/4분기 중 '11년 4/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했으나, 경기회복을 공고히하는 노력 지속 필요

GDP 성장률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 고용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40만명대 이상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개선되는 모습

* 50대 이상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2/4)41 (3/4)47 (10월)48 (11월)51

○ 소비자물가는 장기간의 경기부진으로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 ('13.1/4)1.6 (2/4)1.2 (3/4)1.4 (10~11월)1.1

* GDP갭률(KDI·한은, %): ('12)△0.5~△1.0 ('13)△1.0~△1.5 ('14)△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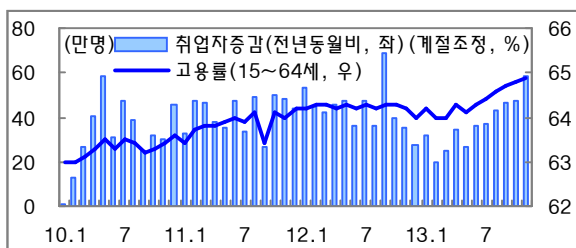
○ 수출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유가안정과 내수회복세 지연 등으로 수입이 부진하면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 경상수지(억불): ('13.1/4)98.7 (2/4)198.0 (3/4)190.1 (10월)95.1 (1~10월)5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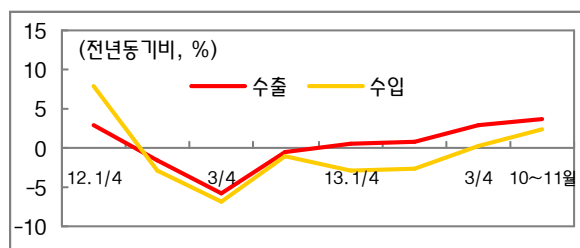
○ 금융시장은 8월 이후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환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 경제지표·정책 발표 등에 따라 등락 반복

* 8월말 대비 증감률(12.20일 기준, %): (주가)+3.0 (원/달러환율)△5.2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



수출입 증가율(통관)



② (내수 여건)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 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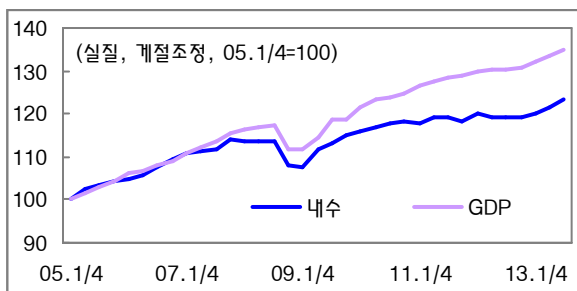
- 최근 소비가 점차 개선되고, 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세

* 민간소비(전기비, %): ('12.4/4)0.8 ('13.1/4)△0.4 (2/4)0.7 (3/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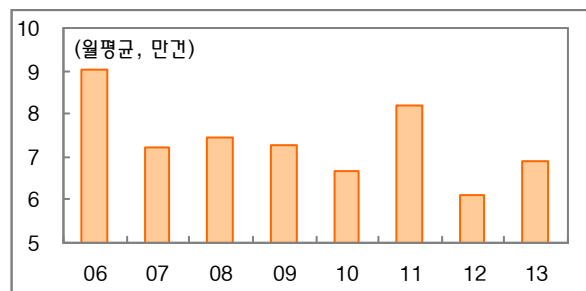
* 총고정자본형성(전기비, %): ('12.4/4)△1.6 ('13.1/4)3.8 (2/4)2.2 (3/4)2.2

- 다만,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서민 등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추이



주택매매 거래량



③ (위험 요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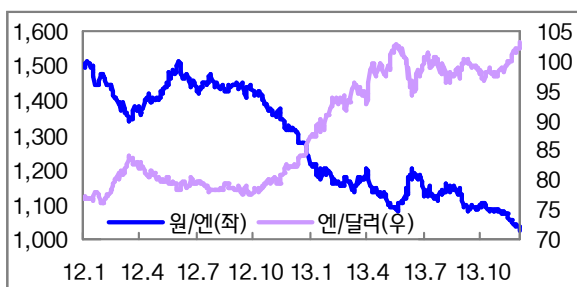
-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

-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증가는 잠재적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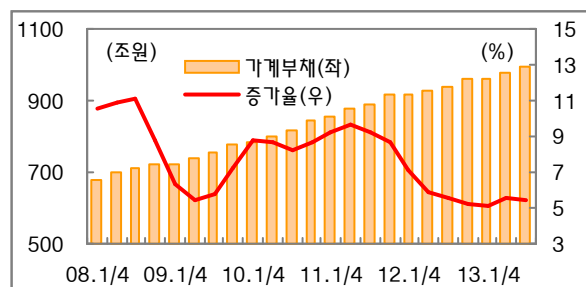
-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 회복세가 지연될 우려

* BBB+이하 회사채 순발행(억원): ('13.7)△2,319 (8)△2,022 (9)△3,204 (10)△5,982

원/엔, 엔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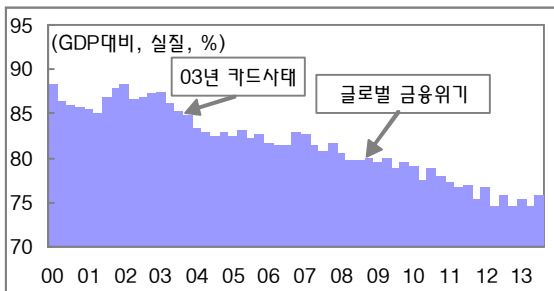


[참고] 내수의 장기부진 현황과 시사점

① (현황) '03년 카드사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충격으로 크게 위축된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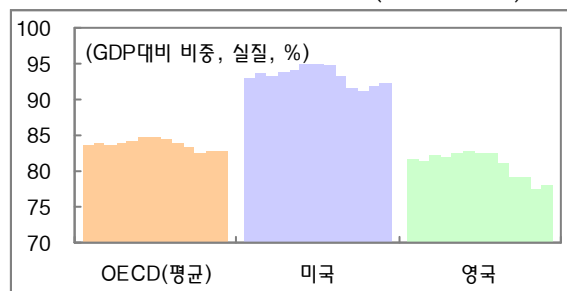
○ 내수부문이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상이

우리의 내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OECD 국가 내수 추이('00~'12년)



* 자료: OECD(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 최근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둔화, 원리금 부담,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부진 지속

* 가계소득 증가율(한은, 평균, %): ('01~'05)6.7 ('06~'10)5.0 ('11~'12)4.7

* 원리금상환 증가율(통계청, 평균, %): ('03~'05)5.9 ('06~'10)11.9 ('11~'12)13.6

* 규제개혁성과 만족도(전경련, %): ('10)39.1 ('11)34.6 ('12)20.9

② (문제점)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불안정, 체감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취약성 확대

○ 해외의 급격한 충격 발생 시 경제의 변동성 확대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 '08.3/4 → 4/4, %)
: <한국> 3.3 → △3.3 <G20> 2.3 → △0.7 <OECD 평균> 0.1 → △2.6

○ 내수의 뒷받침 없이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일자리·가계소득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어려움도 지속

*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내수)0.77 (수출)0.54

* 고용유발효과(한은, 명/10억원): (내수)10.5 (수출)5.5

○ 특히, 투자부진은 자본축적 저하, 생산성 향상 제약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미래세대의 일자리·소득에 악영향

③ (시사점)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등 정책대응이 긴급

3. 구조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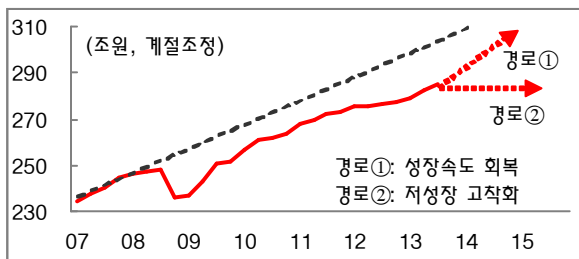
◇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필요

① (성장잠재력 저하) '추격형 성장' 등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선도형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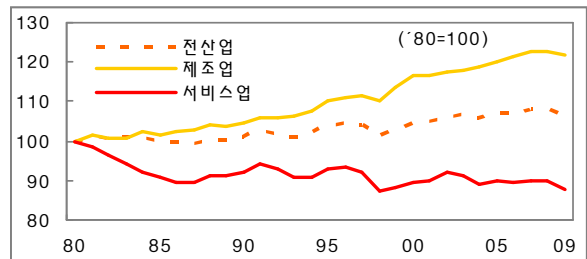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 KDI, '12.11): ('81~'90)8.6 ('91~'00)6.4 ('01~'10)4.5 ('11~'20)3.6

- '14년은 글로벌 위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느냐의 분수령
-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미흡한 가운데, 특히 성장을 견인할 서비스업은 핵심 규제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정체가 지속

우리경제의 성장경로



산업별 생산성 추이(생산성본부, 중요소생산성)



② (공공부문 비효율)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제도와 관행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방만경영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

- 현재의 재정여건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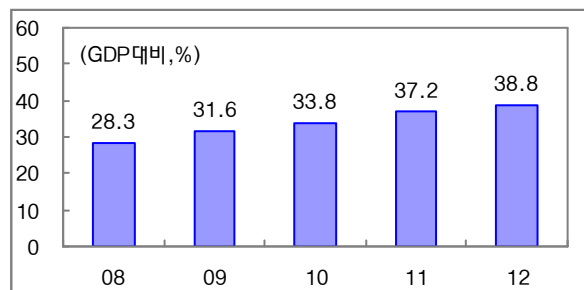
* 국가채무 전망(GDP대비 %, '11 조세연): ('12 실적)34.8 ('30)61.9 ('50)137.7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WEF)

구분	'12	'13
◇ 전체순위	19	25
○ 기본요인	18	20
- 제도적 요인**	62	74
○ 시장 효율성	20	23
○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	20

* 총 148개국 중 ** 정부규제 부담, 정부지출 효율성, 법체계 효율성, 정책결정 투명성 등 평가

공공기관 부채



③ (구조개혁 요구) 고령화, 중국경제 부상,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우리 경제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한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긴 視界 하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

4. 2014년 경제전망

- ① **(고용)**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
 - 고용률(15~64세)은 금년(64.4%)보다 **0.8%p** 수준 개선된 **65.2%** 예상
 -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 ② **(성장)**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경제 성장률(IMF, 3.6%)을 상회하는 3.9%** 성장
 - 상반기는 확장적인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보완,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 개선세 확대로 **연중 고른 성장세**
- ③ **(물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연간 2.3%에서 안정**
- ④ **(경상수지)**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700억불)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어 연간 **490억불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교역량 증가 등으로 연간 **6.4%** 증가, 수입은 수출과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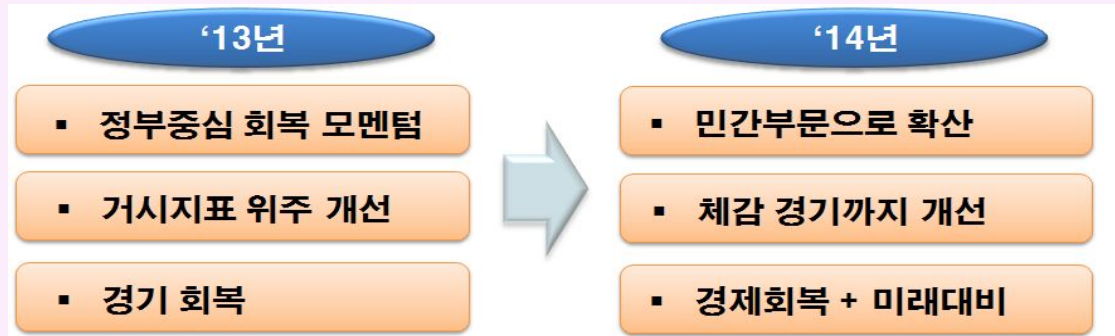
2014년 경제전망

	2013년	2014년
▪ 취업자증감(만명)	38	45*
고용률(% , 15~64세)	64.4	65.2
▪ 경제성장률(%)	2.8	3.9
▪ 소비자물가(%)	1.3	2.3
▪ 경상수지(억불)	700	490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Ⅲ.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2014년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총력 경주



① (민간부문 활력제고) '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이 '14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 → “내수활력 제고”

- ▶ 경기회복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 되도록 “투자 촉진 및 소비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 ▶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 ▶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3~4년을 바라보며 리스크 대응 강화

② (체감경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본격 추진
- ▶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 ▶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갈 필요

③ (미래대비)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대비 과제 본격 추진 → “경제체질 개선”

- ▶ 내년은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
 - ▶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행
 - ▶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 ▶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 ◇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과 점검, 협업 강화

2014년 경제정책방향



IV.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1 내수활력 제고

◇ '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이 '14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 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① (재정정책)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추진
 -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L 제도개선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
- ②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 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
 - 필요시 공개시장 조작과 국고채 발행시기·물량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 도모
 -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제도 운용
 -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 및 외채상환 추진
 -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 발행 등 공기업 외화 조달시 일정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토록 유도
 - 공기업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일부는 상환 유도
- ③ (환율정책) 美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급등락시 시장안정노력 강화

2. 투자·소비여건 개선

①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 의욕을 제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 既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 지속 마련(매분기)

-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확대·신성장동력 육성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추진

* ①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②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③ 지역 투자 ④ 외국인투자

- 규제 시스템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행정입법을 활용한 규제개선* 우선 추진

* 시행령 이하 규제점검·완화,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완화 등

○ 시설재 수입 등 투자 촉진을 위해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일정한도내 한시적 시행)

○ 지식재산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S/W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지원 신설(3월)

② (서비스업 육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추진

○ 既 마련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의료분야 해외진출, 외국교육기관 유치, SW 관련 계약제도 개선 등 추진

○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 리조트 조성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1월)

○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9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선순환 구조 조성

○ 경쟁제한 규제의 대폭 완화, 기술금융 활성화,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 추진

-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 '물류서비스 효율화' 추진(6월)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재제조시장, 자동차 튜닝시장,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품질인증·관련법규 등 인프라 확충
 * 품질인증(13→14년): (재제조 시장) 19→50개이상, (자동차 튜닝부품) 5→30~40개
 *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6월), 크루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12월)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공공부문 외에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9월)
- 세계·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전반에 대한 제조업-서비스업 차별여부와 정책 실질지원 효과 등을 점검하여 개선대책 강구(6월)

③ (지역경제 활력제고)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삶의 질 제고 등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3월)
- 자치법규 정비 및 경쟁시스템 구축(12월)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복지 등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5월)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14년중 75개 기관 이전)하고,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추진
 *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개최,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통합공시(4월) 등

④ (소비여건 개선)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방과후 학교 내실화, 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3월)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인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 연금 공급확충을 추진*(3월)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4월)
 * 민간 주택연금 공급기반 마련, 주택연금 초기 가입부담 완화·가입대상 확대 등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5월)

3. 주택시장 정상화

- ① (전월세 시장 안정) 전세→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 추진
- (공급)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한 매입 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3월)
 - * (예) BTL·리츠 등 사업모델 다양화, 주택기금 저리자금 지원 등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입주기준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 합리화*
 - * (예) 소득·자산기준 정비, 임차인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등
 - (수요)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지원 강화(3월)
 - *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50 → 60%), 공제한도 확대(300 → 500만원)
- ② (주택거래 정상화)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공유형 모기지 공급 대폭 확대(0.3 → 1.5만호), 통합 정책 모기지* 출범(1월)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 생애최초 등 주택기금 자금지원과 우대형 보증자리론(주금공)의 대출요건·금리 등 일원화
 - 인구·가구구조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약제도*와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금융 등 제도 개선
 - *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
- ③ (주거비 경감) 월세 부담 완화 등 서민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행
-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확대·개편*(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대료 지원 강화
 - * 개편안: (지원대상) 73→97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
 -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 등 대학생 주거비 경감,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생애주기상 주거취약 시기 지원

4. 리스크 대응 강화

- ① (대외 리스크 대응) 美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정책대응*과 함께, G-20 등과의 국제공조 등 전방위 대응체계 확립
- * i) 거시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운용, ii)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지속 보완, iii) 외채구조 개선 등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노력 등
-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3~4년 중장기 視界를 가지고 정책여력 확보·대응
- ② (가계부채 연착륙)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1월)
-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 고액전세 보증금 차주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차등화 등
-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촉진
- * 주금공·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5 → '14년 29조원) 및 거치기간 축소(2년 → 1년), 일시상환대출 등의 건전성 기준 강화
- ③ (기업 구조조정) 취약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마무리하고 사전부실 방지를 위해 관련제도 보완
-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취약업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정상화와 일시 유동성 애로기업 회사채 차환지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13년말→'16년말), 주채무계열 범위 확대*, 시장성 차입금 과다계열 공시 등으로 사전 부실관리 강화
-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

2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 청년·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노력 배가

1.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 ① (청년)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 * 청년위원회와 협업 강화, 청년고용 TF 등을 통한 일자리 집중 발굴
 -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확산 등을 통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지속 확산
 - 청년전용 창업펀드,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청년창업 유도
 -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 운영, K-Move 센터 확대(3→7개소)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창업을 적극 지원
- ②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 제고 (여성고용 TF를 중심으로 추진)
 -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수립
 - * 아이돌보미(여가부), 방과후 초등돌봄(교육부), 일시보육시범사업(복지부) 등
 -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
- ③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유도
 -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확산 유도
 -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 점검·평가하는 체계 구축(6월)
- ④ (상생적 노사관계)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제도 개선
 - 임금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추진(1월)
 -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1월)

2. 생계비 부담 완화

- ① (생활물가 안정) 유통구조 개선과 체감물가 안정노력 강화
-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보완하고 시장경쟁 확산
 - 수입제품 경쟁촉진과 가격하락 유도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마련(3월)
 - 농·수산물과 석유·통신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4월)
 -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물가지수 개선
 -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 공개 실시(1월)
 - 물가지표 체감도 제고를 위해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1월)
 -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지수 개발 등을 통해 공식 물가지표 보완도 추진
 - 부동산 중개 등 지사체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9월)
- ② (공공요금 안정)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최대한 유도하고, 원가분석을 제3기관(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 강화
- ③ (서민부담 완화)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
 - 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
 -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3→7단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500만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 맞춤형 복지 정착

- ① (맞춤형 복지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고,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일을 통한 복지 강화
 - * 가족가구: (최대지급액) 70~200→210만원 (소득요건) 1,300~2,100→2,100~2,500만원 이하
 - 기초연금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 *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월 10만원 → 최대 20만원 지급
- ②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 센터를 설치, 공통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간 복지정보 공유 강화
 - *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과 공유 추진(9월)
- ③ (공동체 복지)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체 복지 추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4월)
 - * (예)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기숙사 등→사내병원 등 추가) 등

4. 중산층 기반 강화

- ① (중산층 기반 강화)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마련(3월)
 - * 정부부처와 연구기관(KDI·보사연·노동연·금융연 등) 협업을 통해 추진
 - 현행 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150%) 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 ②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자영업자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유도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6월)

3 경제체질 개선

◇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미래대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여 “경제체질 개선”

1. 공공부문 개혁

- ①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시 보완대책 발표 추진
 -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4분기말 중간평가 실시
 - * 중점 관리기관 이외 기관은 1/4분기까지 정상화 계획 제출, 지속 점검
 -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 수준(‘12년 220%)으로 관리
 -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4대분야**(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고용복지) 우선 추진(3월)
 - 중앙·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공개(1월)
- ②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위험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 중앙 재정부담으로 전이 가능한 분야(공기업·지방정부 등)에 대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 추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분야별 세출절감 노력 강화
 - 통합성과관리 등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5월)
 - * (예) 예산 성과계획서에 관련 조세지출 내용 포함 등
 - 국고금·국유재산 등의 조달·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9월)
 - * (예)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2. 경제 민주화

- ① (조화로운 기업생태계 구축)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상생·발전하는 환경 조성
- 경제력남용 방지·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既 도입된 제도* 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지속 정비
 -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등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규제개편* 추진
 - *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확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 ②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과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대형 유통업체·가맹사업 본부 등의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 독과점 산업별 진입장벽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한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 작성·발간(9월)

3. 수출·해외진출 촉진

- ① (무역구조 변화 선제대응) 서비스·환경 교역증가, 중국 내수 시장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중계·가공 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 수립(3월)
 - * 석유 중계무역시장 창출, 가공무역을 위한 무역금융상품 신설(무보) 등
 -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Green Export 100)을 추진(3월)하고,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마련(4월)

- 보건의료·한류·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6월)
- 온라인 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수립(6월)

②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금융·마케팅 등 中企 수출지원 강화

- 수은·무보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등 국내 통관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中企 물류비용 절감(6월)

* 수은 금융지원(조원): ('13)96.6→('14)1028 / 무보 보험지원(조원): ('13)211→('14)215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 마련(6월)

③ (해외진출 활성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설치(1월)

* 수출입은행 출자: 5,100억원, 무역보험공사 출연: 1,400억원

-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를 구성(3월)하여, 공공부문 투자기관들간 투자정보 공유 등 해외투자 효율화

* KIC,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우정사업본부, 각종 공제회 등 참여

④ (글로벌 영토확장) 정상외교와 **FTA** 체결·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진출 확대

- 정상외교 경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사전준비 및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1월)

- 既 발효중인 **FTA** 활용성과를 점검하여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5월)하고, 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FTA** 조속 타결 추진

- 한중·한중일 FTA 등 역내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심층 영향분석·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TPP** 참여여부 결정

4. 미래 대비

- ① **(창조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식·기술 흐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 既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연중)
 -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既 확대·개편(미래부, 경제5단체 → 기재부·미래부 등 8개부처, 경제5단체,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정부·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등) 구성·운영
 -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추진(연중)
 - 창업·R&D투자·판로개척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규제사항을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 마련(6월)
 - * (예)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합병시에 적용되는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을 50% 초과 주식 인수시에도 지원 등
- ② **(창조금융 기반강화)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1월)
 - 창업 촉진과 투자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4월)
 -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9월)
- ③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9월)**
-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정책대안 마련
 - * (예시) 공정경쟁 촉진, 창업·벤처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 개혁,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에너지·자원확충 등

V.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업, 개방·공유와 정책집행·점검 강화**

1. 협업과 개방·공유

- 「협업·개방·공유」의 정부 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
 - (협업) 부처간, 정부-지방간, 공공-민간 부문간 다양한 정책 협력 기반 확대
 -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업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부여
 -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14년 연구용역) 등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 모델과 정책사례 발굴
 - (개방·공유)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2월)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14.下)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모바일서비스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지역통계(시군구) 확대(7월), 고용관련 보조지표인 노동저활용지표 발표(11월) 등

2. 정책집행 점검 강화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집행실적을 내실있게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 * 당초 계획에 따라 대책수립·제도개선 등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 등 지속 점검
- 민-관합동 정책현장 점검,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장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구현
-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KDI 경제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 * 각 부처의 정책추진 상황 등록 → 국민 의견제출 → 정책집행·점검에 반영

< 별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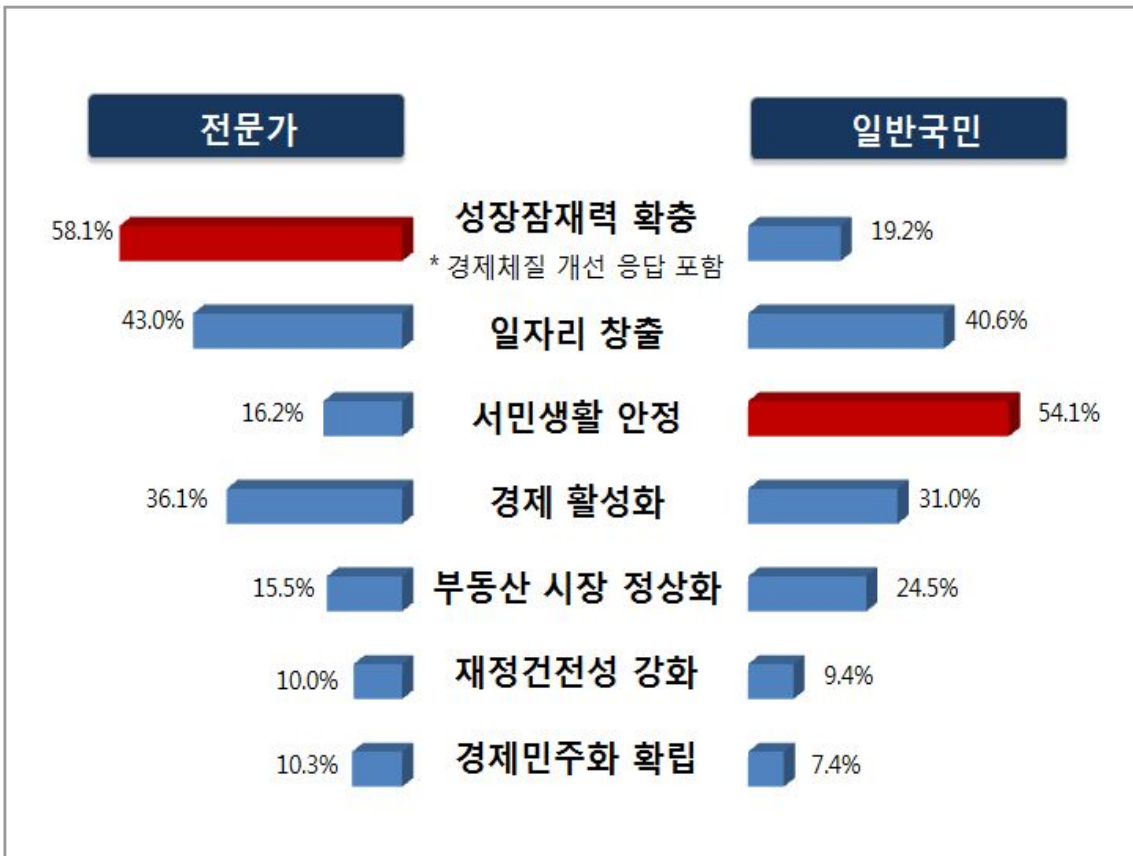
-
1.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4.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

□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재부-KDI 공동으로 전문가(291명, 교수·기업인·연구원)와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11.8일~11.14일)**

① **(대내외 위험요인)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위험 증가」, 「고용불안」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택(복수응답)**

	대외 위험요인				대내 위험요인			
	양적완화 축소	엔화약세 아베노믹스	신흥국 성장둔화	미국 재정불안	가계부채 위험증가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소비자등 내수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전문가	49.1%	16.8%	13.4%	12.4%	41.6%	36.8%	33.7%	26.8%

② **(2014년 중점과제)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 일반국민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복수응답)**



③ (내수기반 확충) 「가계소득 기반 확충」,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응답

	가계소득 기반 확충	기업투자 환경 개선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공공기관·민간 투자 확대
전문가	33.3%	31.6%	14.1%	12.4%	7.6%

④ (수출경쟁력제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수출 시장 다변화 유도」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응답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기업의 FTA활용기반 강화	FTA체결 확대
전문가	61.5%	17.9%	6.9%	6.9%	6.5%

⑤ (부동산정책 과제) 전문가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일반국민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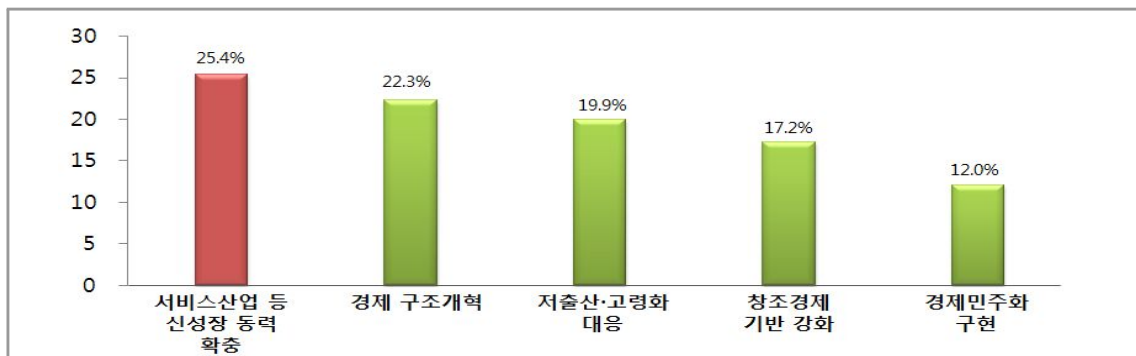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매매시장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관련 규제 개선
전문가	29.2%	28.2%	18.2%	12.4%	11.3%
일반국민	12.5%	20.5%	30.5%	23.2%	12.8%

⑥ (고용·노동정책 과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다음으로 전문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일반국민은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응답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전문가	50.9%	24.7%	13.7%	9.3%
일반국민	28.8%	23.2%	28.8%	18.3%

⑦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 「경제 구조개혁」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응답



별첨 2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 정부발표안 기준, 향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세부내용 변경 가능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맞춤형 급여 (139만명, 6.9조원 → 152만명, 7.2조원)	기초수급자	'14.10월	71,814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부양의무자 중위 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14.10월	
▪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하여 1인당 월 10만원 → 20만원 지급)	장애인	'14.하	4,460
▪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14.7월	48
▪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 확대(70~200만원 → 210만원)	일정소득(홀벌이 2,1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14.1월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96→121개, 지역아동센터 3,742→3,989개)	아동	'14.1월	1,563
▪ 대학생 국가 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180만원 인상)	대학생	'14.1월	31,850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 폐지 (현재 1회 5천원 → 폐지)	전국 만 12세 이하	'14.1월	1,230
▪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연 450만원)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1월	1,225
▪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전 국민	'14.3월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14.1월	93,643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개편 (지원대상 73→94만 가구, 임대료 8→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	'14.10월	7,285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율 50%→60%, 공제한도 300→500만원)	저소득층	'14.1월	-
▪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 허용(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14.1월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 상 준공공주택 10년 보유자	'14.1월	
[의료비 부담 완화]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본인부담 '13~16년간 연 60만원 경감)	해당 질병 환자 등	'14년	63,221 (전체 건보료 지원)
▪ 의료비 본인상한제 세분화(3→7단계) (본인부담 연 200~300만원 → 연 120~250만원)	연소득 3,800만원 이하	'14.1월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개당 본인부담 150~300만원 → 75~150만원)	75세 이상 노인	'14.1월	
[소상공인, 농·어민 지원]			
▪ 농어업인 재해보험·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45.9만원)	농어업인	'14.1월	72
▪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14년	30
▪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9,150억원)	소상공인	'14년	9,150
▪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 (2500개)	소상공인	'14년	56.5
▪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4년	16
▪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자영업자	'14.6월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노후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제도 추진 (월 10만원 →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65세이상 (소득 하위 70%)	'14.하	5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 공급확충 추진 	주택연금 가입자	'14.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자	'14.4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 (융자·매출채권보험: 13 → 17조원 신용보증·투자: 69 → 78조원) 	중소기업	'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14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14년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 인정비율 확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0.5 → 0.75명) 	중소기업	'1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기업	'14.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 및 장애인	'14.1월	
[국민편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전 국민	'1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마련 	전 국민	'14.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중개 등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 	전 국민	'14.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방안 마련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숙사 등 → 사내병원 등 추가) 	근로자	'14.4월	-

1. 1/4분기 주요 추진과제 (25개) (* 밑줄은 주무부처 · 기관임)

(1) 1월 (1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부, 기재부
▪ 통합 정책모기지* 출범 * 생애최초 등 주택기금 자금지원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주금공)의 대출요건 · 금리 등 일원화	국토부, 금융위 등
▪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기재부 등
▪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고용부, 기재부
▪ 생필품 등 가격비교 및 원가정보 공개	소비자단체
▪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	통계청, 기재부 등
▪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제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공개	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 해외건설 ·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치	기재부, 산업부
▪ 정상외교 경제분야 범정부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기재부, 산업부 등
▪ 기술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금융위

(2) 2월 (1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월간 재정동향 발간	기재부

(3) 3월 (1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중소기업 S/W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 신설	기재부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안행부 등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교육부
▪ 주택연금 공급확충 추진	금융위, 국토부 등
▪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규제개선,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국토부, 기재부 등
▪ 월세보증 활성화 등 월세지원 강화	국토부, 기재부 등
▪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마련(병행수입 활성화 등)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 마련 및 중산층 기준 정립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통계청 등
▪ 4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우선 추진 * 해외자원개발 · 정보화 · 중소기업 · 고용복지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청 등
▪ 다양한 무역방식(전자상거래, 중계무역) 수출 확대방안 수립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환경부, 산업부
▪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구성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미래부 등

2. 2/4분기 주요 추진과제 (19개)

(* 밑줄은 주무부처 · 기관임)

(1) 4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통합공시	기재부, 국토부 등
▪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농림부, 기재부, 금융위
▪ 분야별 유통구조 성과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등
▪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방안 마련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등
▪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마련	농림부, 기재부, 산업부
▪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금융위

(2) 5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	기재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등
▪ '잠자는 돈' 활용방안 수립	금융위
▪ 조세지출 · 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등
▪ FTA 활용성과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산업부, 기재부 등

(3) 6월 (9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물류서비스 효율화 추진	국토부, 기재부
▪ 제조업-서비스업 차별여부 등의 점검 및 개선대책 강구	기재부, 산업부 등
▪ 부처별 일자리 창출효과 주기적 점검 · 평가체계 구축	기재부, 고용부, 국조실 등
▪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기청, 금융위 등
▪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수립	기재부, 산업부
▪ 국내 통관시스템 선진화	관세청, 산업부
▪ 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 마련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 중소 ·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규제 추가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 등

3.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10개)

(* 밑줄은 주무부처 · 기관임)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 국가통계포털 제공 지역통계 확대(7월)	통계청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9월)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등
▪ 그린건축 ·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9월)	국토부, 산업부 등
▪ 지자체 관리 수수료(부동산중개 등) 합리화 방안 마련(9월)	국토부, 안행부, 기재부 등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간 복지정보 공유 강화(9월) *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지료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과 공유 추진 	국세청, 복지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금·국유재산 조달·운용방식 개편(9월)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 발간(9월)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중간평가 실시(9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9월)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9월) 	기재부, 미래부 등

4.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하반기)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저활용지표 발표(11월) 	통계청, 고용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정비 및 경쟁시스템 구축(12월)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검토(12월) 	기재부, 복지부

5. 지속 추진과제 (7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 지속 마련(매분기) *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투자 촉진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추진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안행부, 중기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은 총액한도대출 지원효과 제고 	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요금 조정시 제3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 추진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추진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중기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KDI, 기재부 등

< 별첨 4 >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1. 기획재정부	46
2. 미래창조과학부	47
3. 교육부	48
4. 외교부	49
5. 안전행정부	50
6. 문화체육관광부	51
7. 농림축산식품부	52
8. 산업통상자원부	53
9. 보건복지부	54
10. 환경부	55
11. 고용노동부	56
12. 여성가족부	57
13. 국토교통부	58
14. 해양수산부	59
15. 공정거래위원회	60
16. 금융위원회	61
17. 방송통신위원회	62
18. 식품의약품안전처	63
19. 국세청	64
20. 관세청	65
21. 조달청	66
22. 통계청	67
23. 중소기업청	68
24. 특허청	69

기획재정부

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와 리스크 대응 강화

-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추진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G-20 국제공조 등 전방위 대응체계 확립

② 투자·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

- 규제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 의욕을 제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 既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 지속 마련
-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부담 완화

-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 제고
-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보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④ 공공부문 개혁과 미래대비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시 보완대책 발표 추진
- 재정위험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 우리경제의 현 주소를 면밀히 진단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개혁'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① 전략적 R&D 투자 및 성과 창출

- '미래부 기술사업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수요자 지향형 R&D혁신,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기술사업화 추진체계개선, △네트워크 강화의 4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추진
- 미래성장동력과 30대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R&D투자 집중, 4대(기초/에너지/소재/바이오)분야 투자전략 마련
- 나노, 융합 등 유망 분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 제2기 국가나노기술지도('14~'25), 제2차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14~'18) 등
- (출연(연)) 특허 이전 확대, 해외 수요 기술의 선제적 개발, 원천기술 R&D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R&D 확대 등 추진

② ICT 신산업 육성 및 ICT의 타분야 확산

- 사물인터넷(IoT) 표준화 추진, 클라우드 컴퓨팅·스마트미디어·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 네트워크 산업 상생 발전, 컴퓨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휴먼케어·교육콘텐츠 등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생활공감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
* 한-중 '평요우(朋友) 프로젝트' 본격추진, 한-인니 'smart partnership' 구축
-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신수요 창출 및 산업활력을 제고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본격 추진

③ 과학기술·ICT 규제 개선 추진

- 과학기술 옴부즈만 및 과학기술규제 지원센터 지정·운영, 발굴된 과학기술규제 종합개선 대책 수립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저해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개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교육부

①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3월)

- 최근 3년간 사교육비는 감소 추세*이나, 가계의 사교육비 하락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 등 마련

* 총 사교육비 : ('10년) 20.9조원 → ('11년) 20.1조원 → ('12년) 19조원

-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시행 및 사립초교 영어 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 추진

② 산업-대학교육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14년~)

- 산학협력의 범위를 기술·공학 분야에서 나아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까지, 대상을 협동조합·사회적기업까지 확대

③ '시간선택제 교사' 단계적 추진('14년~)

-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주2~3일 근무하며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 현직 전일제 교사의 전환을 우선 추진*(추후 재전환 보장)하고,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은 신규 증원을 통해 추진

* 전환으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④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2.8→3.2조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 국가장학금 예산 현황 : ('12) 1.75조원 → ('13) 2.775조원 → ('14) 3.185조원

- 셋째아이 이상으로, 소득분위·성적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14 학년도 대학 신입생을 신규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 경감

*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14년 정부예산안) : 1,225억원(기준금액 450만원)

외 교 부

① 세일즈외교/기업 및 국민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

- 우호적 경제통상 환경 조성 및 전략적 관리
 - 정부간협약체, 고위인사교류, 실질 협력사업 진행 관리 및 미래 발전 방향 제시
 - 경제통상환경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FTA,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정상 순방 계기 등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기업·국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② 국제경제 협의체 적극 참여 및 역할 제고

- G20, OECD, APEC, UN ESCAP, 다보스 포럼 등 다양한 국제경제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영 및 글로벌 경제 현안 해결에 기여

③ 에너지·녹색성장·기후변화 외교강화

-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외교 강화
-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확대를 통한 원전수출 지원 및 동북아평화 협력구상을 통한 원자력안전 분야 협력 증진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다자국제기구 등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녹색성장·지속가능발전(SD)분야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및 물·환경 분야 기업진출 기회 확대 모색
- Post-2020 新기후체제 형성에 적극 참여 및 우리입장 반영 노력

안 전 행 정 부

①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 확대

- 협업·국정과제 분야, 정책·현장의 연계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중앙부처간> : 개방·공모직위 활용, 국·과장급 교류임용 확대
 - (국장급) 개방·공모직위 타부처·민간전문가 교류임용 추진
 - (과장급) '과장급 공모직위제' 신설·확대, 개방형 직위 수 확대
- <중앙·지방간> : 교류부처 확대 및 교류방법 다양화
 - 정책과 현장의 연계 필요분야를 중심으로 안행부 위주에서 지방업무가 있는 부처로 교류 다양화

② 지역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1.4만개** 제공하고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및 소득 창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교원의 **4대서비스 분야 공무원 확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추진

③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

- 소통 및 개방의 정부 3.0 기조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쌍방향적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체감형 물가관리 추진
- 2013년 지방물가평가 및 지역물가책임관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우수시책발표회 등을 통해 확산
- 착한가격업소 전국 네트워크 구성 등 민간의 자율적 물가안정 노력 지원
 - * 주부물가모니터단(전국 723명), 지역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적극적 협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1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생활 속 문화복지 강화

-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통합 지원 및 소외지역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학교·지역사회 연계 토요일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체험 기회 확대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예술 창작지원 등 예술인 복지 강화

2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실현 및 내수관광 활성화

- 의료관광 클러스터 시범 조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융·복합 관광 창출
- 관광숙박시설 확충 용자지원 대폭 확대 및 창조관광 기업 발굴 등을 통한 민간투자 증진 및 관광 활성화
- 지역관광공동체(관광두레)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

3 장르별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및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콘텐츠코리아 랩 본격 운영 및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등으로 차세대 콘텐츠산업육성 기반 조성
- 음악·만화·패션·캐릭터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공정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교육 실시

4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 이미지 제고 및 한류 확산
 -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14.9.19~10.4) 45개국 13,000여명 참가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동계스포츠 경쟁력 강화,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
 - * '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17 U-20 월드컵 대회 등

농림축산식품부

①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인 대상 맞춤형 홍보* 등 추진
 - * 대형유통매장 내 안테나숍 설치, K-Food 박람회, 대규모 판촉·홍보행사 등
- 전문조사기관과 연계하여 시장 상황 및 검역·검사체계 등 국가별 수출정보 조사를 확대하고 수출농가·업체에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②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ICT를 활용한 창의적 농식품 직거래 모델 개발 및 확산
 - *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 및 소상공인 직거래를 위한 POS Mall 구축
-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및 관리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 수급안정을 선도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사전 전달체계 강화
 - * 전국 농협하나로클럽 농산물 가격예보(농협), 수급정보 주례 홍보(aT) 등

③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체감형 복지지원 확대

-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 소득기준금액 상향(79만원 → 85) 조정(1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4월)
 -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 농촌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 등) 확충
- 농촌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교통 서비스 제공모델 발굴·확산

④ 농식품분야 신규시장 창출

- 핵가족화 등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1인식품, 실버식품, 어린이식품 등 미래 식품트렌드를 주도할 신제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①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한 각종 FTA 협상 지속 추진

-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TPP는 심층 영향분석·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가며 신중하게 검토
- 베트남 등 신흥국 대상으로 상대국과의 산업·자원·에너지 협력 등과 연계한 상생형(win-win) FTA 지속 추진

②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역 금융 및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을 지속 추진
- 현장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투자처를 제공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

③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4대 분야 15개 과제 중심의 중장기 산업기술 R&D 투자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④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

- 동·하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전소 적기 건설,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적극 시행
- 원전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원전 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
- 석유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부담 경감 및 물가 안정 기여

보건복지부

① 맞춤형 복지의 확대 및 내실화

- 노인빈곤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
*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대상의 90%에게 20만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인의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완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연계 범위 확대(8개 기관 19종 자료),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하여 복지급여 중복수급을 방지
-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장 및 복지담당인력 확충(1,177명)을 통해 복지깎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②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행위·치료재료, 선별급여제도 시행 등 추진(5,900억원)
- 선택진료·상급병실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을 경감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3→7단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500만원)

③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개선 및 보건산업 글로벌화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규제개선
-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장애인·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 해외환자 유치 확대('14년 25만명 목표), 병원 진출 펀드 조성(500억원 규모)을 통한 해외 의료진출 확대

환 경 부

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장, 자동차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
- 녹조발생 빈번지역에 **총인중심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수질관련 통합 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하여 체계적 녹조대응체계 구축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등록(15~)**을 위한 이행지원 체계 구축하고, **장외영향평가제** 등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② 더 좋은 환경서비스 제공

- 실내공기 오염원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충간소음, 빛공해**와 같은 생활불편 환경문제를 경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심속 자연마당(8개소) 등 생태적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수생태계 복원 및 건강성 제고를 통한 **더불어 누리는 생태서비스 확대**
- **농어촌 상수도 확대(2,778억원, 16만명)** 및 **안심지하수 시범사업(33억원)**, **취약계층 환경보건 진단·개선 등 환경서비스 수준 제고**

③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 등 **폐기물감량제**도를 내실화하고, 자동차 중고부품 등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 이행을 촉진
-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 등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 이행을 지원하고 사회 전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확충
- 국토 생태공간을 **확충·복원**하고, 정보공개 및 공유를 강화한 **환경영향평가 3.0**을 도입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환경관리 추진**

④ 환경과 상생하는 창조경제 구현

-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보험상품을 활용한 환경오염피해구제 등 **효율적·생산적 환경규제 도입**
- 기후, 환경보건 등 **환경 新산업**을 발굴하고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Green Export 100)** 등 환경산업 집중육성
- 지역별 **녹색환경지원센터(18개소)** “**지역 일자리 네트워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추진

고용노동부

- ① 고용률 70% 로드맵 본격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성과 가시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 여성고용, 中企 인력수급 등 5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 * 일하는 방식·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행동변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Rolling Plan) 수립
- ②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수요에 기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확산을 유도하여 개인이 필요와 의지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③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취업유망 업종 교육(폴리텍) 등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로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
 - *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1→3회), 아동연령 상향 조정(만6세→8세) 등
 -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최대 6억원), 주거지 근처 스마트 워크센터 설치(최대 10억원) 등 인프라 지원 강화
- ④ 스펙초월 채용 등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완료·확산 등을 통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지속 확산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14~'16년 정원 3%이상) 등 청년 일자리 확대
- ⑤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 임금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추진(1월)
 - 정년연장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규채용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1월)

여성가족부

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 구직희망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경력·전공·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형별 새일센터 확충
 - * 새일센터 120개소 운영('13년 기준) → 농촌형,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등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 확충 예정('14년 예정)

②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시행
-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전 기업으로 확산, 기업경영자 인식제고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공감대 확산

③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

- 영아종일제 지원아동 연령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 영아종일제 돌봄 확대 : '13년 12개월 → '14년 24개월
 -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 시간제 돌봄(5,000원→5,500원), 종일돌봄(100만원→110만원)
- 종합형(가사추가), 보육교사형 등 서비스 유형 다양화 시범운영

④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간병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성폭력상담소(92→96개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16→22개소) 등
 - *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및 돌봄서비스 지원,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지원

⑤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 추진

- 위기청소년 상담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출, 학업중단, 자살 등 청소년 위기행태 분석 및 적시대응체계 구축
 - * 청소년 위기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모에게 위기경보를 알리는 등 빅데이터 활용 사업화 추진

국 토 교 통 부

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거비 경감 등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개선 수요 등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
 - * 공유형모기지 공급 확대(0.3→1.5만호), 통합정책 모기지 출범(1월) 등
- 전세 → 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 대응 추진
 - *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등 매입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 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 및 입주기준 등 운영방식 합리화
-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를 확대·개편*하고(주택바우처), 대학생, 고령자 등 생애주기상 주거취약시기 지원을 강화
 - * 지원대상 : 73→97만 가구 / 가구당 월평균지급액 : 8→11만원
 - **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 등 대학생 주거비 경감,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② 물류서비스, 자동차, 그린건축·리모델링 신규시장 창출·활성화

- 물류서비스 효율화(6월) 및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9월) 방안을 마련하고, 튜닝부품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③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 연계·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 * 150개 대상기관 가운데 '14년중 한전, LH, 근로복지공단 등 75개 이전 예정

해양수산부

①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해운산업 육성

- 해운분야 신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선박관리 산업 육성
- *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중장기 항만운영계획 수립

② 양식산업 육성

- 양식단지, 내수면 등 고품질 수산물 생산 기반 확충 및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한 관측사업 고도화(양식산업발전법 제정)

③ 수산물 수출 인프라 확충

- 중소 수산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변동보험 도입, 국내외 물류기반 확충 등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해외시장 다변화 등

④ 수산식품산업 육성

- 고차 가공·서비스 산업과의 융합 거점인 거점단지(6개소) 조성, 가공시설 건립(70개소) 및 영세 가공업체 융자 지원(80개)

⑤ 해양수산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기구 진출 확대, 정보공개 등을 통한 민·관 협업 대응체제 구축 및 수원국과 공생하는 맞춤형 원조사업 추진

⑥ 도서민 해상교통여건 개선 및 선원 노후생활 안정 지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접안시설 개선, 여객선 현대화 등 해상교통복지 인프라 확충 및 선원 공제제도 도입

⑦ 수산 정책보험 활성화

- 신속한 재해 대응·복구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보험 적용 대상 및 보상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① 既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의 정착·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일감몰아주기 규율(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 규정
- 개정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부당특약(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②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개편 추진

-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기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 다만,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 대기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규제개편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 (예)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 등

③ 대형유통업체·가맹사업본부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

-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실태 점검 실시 및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 가격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④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보고서 발간

금융위원회

① 창조금융 활성화 및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

-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 창업 촉진과 투자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②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취약요인 선제대응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
 -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의 전환 촉진
 - * 주금공·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5 → '14년 29조원) 등
- 취약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마무리하고 사전부실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취약업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정상화와 일시 유동성 애로기업 회사채 차환지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13년말→'16년말), 주채무계열 범위 확대, 시장성 차입금 과다계열 공시 등으로 사전 부실관리 강화

③ 내수활력 제고 및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인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공급 확충 추진
 - * 민간 주택연금 공급기반 마련, 주택연금 초기 가입부담 완화 및 가입대상 확대 등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①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 방송의 공익성 제고, 미디어 다양성 구현 및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 등 품격 높은 방송 구현
- 지상파 UHD 실험방송 추진, 지역·중소 방송 제작역량 강화 지원 등 방송 서비스·콘텐츠 경쟁력 제고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 및 광고산업 진흥

-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지원 및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동반성장 유도
- 획일적인 간접광고 형식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을 통해 창의적 광고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 지속 추진을 통해 상생의 광고 생태계 조성

③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확대

-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보조금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방송통신시장 감시 강화
- 스마트 기기의 접근성 및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예방 관련 교육 확대 추진
-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개인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온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SNS스팸 등 신종 스팸 대응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 (축산물) 집유업, 유가공업 (가공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다소비식품 등
-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사전등록제 도입, 현지실사 확대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
-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음료류에 대한 납(Pb) 등 중금속 함유량 실태조사 및 중금속 기준 국제조화 추진

② 불량식품 근절 추진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시행
 -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을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
- 온라인 판매 불량식품에 대한 자동검색 및 판매사이트 신속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판매식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③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정부가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15년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의무적용)

④ 의료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마약류 **RFID** 부착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및 도매상의 판매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기재 의무화 등 추적관리체계 방안 마련
-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개발전문기업(CRO) 육성

국 세 청

① 경제상황을 감안한 안정적 세수관리

- 국민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과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여 세수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과학적 세원관리, 현금 체납정리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매진

② 국민이 공감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

- **FIU** 법 개정 등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를 토대로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4대 중점분야***에 세정역량 집중

*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 과세영역 밖의 비정상적 부분을 정확히 포착·시정하기 위한 5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되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영

* 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등 4개 분야

③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일자리창출기업의 조사부담 완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 등 경제적 약자 적극 지원
-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추진,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세정협력 강화

④ 세정의 주인인 납세자 중심의 성실납세풍토 확립

-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보호하고 성실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기관간 정보공유·협업을 통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강화, 탈세감시 체계 활성화 등 국민중심의 행정패러다임인 정부3.0 조기 정착

관 세 청

① 수출입 통관업무 수행체제 개편

-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을 성실도에 따라 구분하여 성실업체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에 관리역량을 집중
- 수출입신고 첨부서류의 전자문서 제출을 확대,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對국민 통관서비스 제공

② 국가재정 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 관세-내국세간 조정제도, 국내제조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활성화 등 관세평가·품목분류 서비스 확대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 특수거래관계, 농수산물 등 고위험 품목 업종군의 변칙적 세액탈루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

- 수출기업의 **FTA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C/O 자동발급제도 도입, 증빙서류 통합 등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
 - * 동종동질 물품을 반복수출하는 기업은 C/O(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별도 심사없이 발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확대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화 유도

④ 중소기업 성장 및 국민생활 보호정책 강화

- 중소기업청·금융회사와 함께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AEO공인**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AEO참여 기회를 확대**
-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산 둔갑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체감형 테마단속**을 실시
 - * 협의체 구성(주관 : 관세청, 기재부·지경부·농관원·전국 광역단체 참여)

조달청

- ①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지원
 - 첨단융합·신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견인
 - 공공정보화 사업발주 지원(PMO) 강화, ICT/SW 발주제도 개선으로 ICT/SW 산업 발전을 지원
 - * PMO 서비스 확대('13년 30건 → '14년 60건), e-발주지원시스템 구축, 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활성화 등
 - 종합심사제 시행('15년) 기반 구축,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등 공사발주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 ② 공공판로 지원 내실화로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
 - 실적요건 평가 완화, 지역경쟁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입찰·수주기회를 확대
 - 신기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 개선, 적정 조달가격 보장, 입찰·계약 부담 경감 등 보다 사업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
- ③ 경제적인 조달과 국가자산 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 다수기관 공통 수요 물품·서비스의 통합구매를 확대하고, 가격 및 설계관리를 강화하여 조달예산을 절감
 -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국유부동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물품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 선진화
- ④ 공공조달시장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문화 정립
 - 담합, 허위실적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위장 중소기업, 조세 체납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조달시장 진입 차단
 -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 활성화, 하도급 관리 시스템 개방 등을 통해 건설·ICT 시장에 상생문화 정착

통 계 청

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개선

- **(프랜차이즈 통계 확대)** 서비스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통계 대상업종 확대 및 세분화(중분류→소분류)
- **(서비스산업 세분화)** 서비스업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도별 산업 세세분류로 확충(193개업종→462개업종)
- **(지역지표 개발)** 지역별 서비스업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생산지수 공표(12월) 및 소매판매액 지수 개발(12월)
- **(지역계정 개편)** 국민계정과와의 정합성 제고 및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08SNA를 반영하여 지역계정 개편
- **(소상공기업통계)** 소상공기업의 자산·부채·자본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상공기업통계 작성 검토

② 국가통계의 국민체감과의 차이 해소

- **(물가통계 국민체감 개선)** 소비자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지수개편 준비
- **(소득통계 개선)** 응답·조사 부담 경감 및 정확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검토
- **(고용통계 국민체감 개선)** 불완전취업, 잠재노동력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저활용지표 개발로 체감괴리 해소

③ 국가통계 생산관리 허브체계 구축

- **(지역통계 대국민서비스 확대)**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시군구 통계 123종을 KOSIS 연계·수록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민간 개방)** 개방·공유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SGIS 오픈 플랫폼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를 범정부부처로 확대하여 서비스 시스템 구축·시행

중 소 기 업 청

① 청년창업 부담완화 및 재창업 활성화

-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공간,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 CEO」 양성('14, 1,000개팀)
-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창업시, 창업사업화 및 창업 격려금을 지원하는 벤처 현장근무 지원제도 도입
-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800 → 1,000억원)하고, 창업 R&D(1,414억원), 청년창업자금(1,500억원) 등 지원
- 신용관리교육,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창업 지원시스템 도입

②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이력 연계 및 통합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배분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장기재직(5년)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 공공조달시장 內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 의무화
- 19개 정부·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지원(KOSBIR) 의무화 및 지원규모 상향 조정('13, 1.5조원 → '14, 1.7조원)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회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정보 제공,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 확산 등 성공 창업 유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14.1),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제정('14.하) 등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특 허 청

- ① 민·관 합동으로 '지식재산 평가정보 유통체계' 구축
 - IP 실거래 및 평가사례를 통합 DB로 구축하여 IP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IP 거래 활성화 추진
 - * 지재위 주관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14년까지 관련 DB 구축 추진
 - 금융기관이 특허평가정보에 저비용으로 신속·편리하게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구축
 - * 금융기관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연계 추진
- ②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
 -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권리확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모방상표·디자인 근절을 위해 상표·디자인 법령개정
 -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를 보호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14.1 시행
- ③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및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제품혁신* 및 기업 맞춤형 'IP 금융자산화' 전략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보유 IP의 전략적 사업화 추진
 - * 트리즈 기법 적용,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
 - IP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